

로컬 관광 트렌드 맞춰 민·관 ‘농촌 관광·문화 활성화’ 박차

농식품·문체부 장관, 협업 의지 다져
충남 홍성 문당환경농업마을 방문
유기농업 테마 체험프로그램 체험
신세계, ‘지역 특산물 발굴’ 통해
고급 레스토랑·전국 백화점 판매

두 관계부처가 힘을 한데 모아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일 농촌 관광 활성화 및 지역문화 발전 등의 목표가 맞닿아 있다는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송 장관과 유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홍성 문당환경농업마을을 찾아, 농촌 관광 및 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업 의지를 다졌다.

문당환경농업마을은 국내 최초로 오리농법을 도입했다. 농촌 ‘크리에이티브’(Creatour) 브랜드 ‘따르릉 홍성 유기농길’ 등 유기농업을 테마로 한 다양



충남 홍성에 위치한 문당환경농업마을 내 전시관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또 문체부가 지정한 ‘로컬100’ 중 하나이자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거점 공간이다. 문체부는 지역의 매력적인 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명소, 콘텐츠, 명인 등 100가지를 선정해 ‘로컬100’으로 지정한 바 있다. 특히 마을에 위치한 ‘달마당 스테이’는 문체부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사업의 주요 성과로 작년 한 해 900여명의 체류형 관광객이

방문했다. 충남도청소재지 내포신도시가 자리해 있는 홍성군은 광천길, 남당항 대하 등이 유명하다.

송 장관과 유 장관은 문당환경농업마을의 시설 전반을 살펴본 뒤, 홍성의 식재료와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 중인 지역 창업자들과 함께 ‘유기농 쌀피자 만들기’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또 직접 만든 피자과 홍성의 곡물 특산품을 활용해 다양한 맥주를 상

품화한 ‘이히브루’의 제품을 맛보고 지역 창업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두 장관은 특산물에 지역 고유의 스토리를 더해 문화레시피로 재탄생한 지역 생산품과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농촌융복합 인증 제품들의 팝업 부스도 둘러봤다.

송 장관은 “농촌관광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 농업 외에도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관광 트렌드의 변화로 숨은 여행지 발견, 틀을 벗어난 특색있는 여행, 즉흥 여행 등이 부각되고, 독창성 있는 로컬 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문체부와도 협력을 강화해 농촌지역의 문화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년과 농촌이 만나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청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우리 농촌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유 장관은 “지방소멸 시대에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유의 문화와 특화된 관광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민·관 협업을 통해 지역의 숨은 매력을 발굴하고, 더 많은 사람이 지역을 사랑하고,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통 대기업도 이날 행보에 합류했다. 신세계는 ‘로컬100’,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대상지와 ‘농촌협약’ 대상지를 필드트립 후보지로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 식재료와 식문화를 전파하는데 효과적인 ‘로컬이 신세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농식품부·문체부와 머리를 맞댄다. ‘로컬이 신세계’란 지역 필드트립을 통해 지역 특산품을 발굴한 뒤, 셰프(주방장)와 연계해 고급 레스토랑에서 요리를 제공해 특산품의 가치를 높이고, 전국 백화점을 통해 이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두 부처와 신세계는 협약을 맺고,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환경부 “기후대응담 사업비 12兆 사실 아냐”

野·환경단체, ‘제2의 4대강’ 반발
환경부 “아직 총사업비 말하기 어려워
제방만으로 하천 홍수 대응 힘들어”

환경부는 기후대응담 총사업비가 십수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야당과 환경단체의 추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기후대응담 건설에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와는 곧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지난 달 30일 발표한 기후대응담과 관련해 백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번에 발표된 기후대응담 후보지는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 등이다. 사업에 대해 야당과 환경단체는 ‘제2의 4대강사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달 31일 “내년 준공예정인 총저수량 180만㎥ 원주천댐의 총사업비가 688억 원”이라며 “이를 기후대응담 14개 총저수량 3만1810만㎥에 대입하면 12조 원이 든다”고 주장했다.

우선, 야당과 환경단체가 14개 댐의 총사업비를 12조원으로 추정된 것에 대해 환경부는 “과거 14개 댐 건설을 발표했을 때 총저수량은 4억8000만톤(t)이었으나, 이번에는 3억2000만가량이 다. 그때 추계한 게 3조600억정도였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담 후보지(안) 14곳,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봐도 수십조나 12조는 전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에 지어진 댐의 경우 보상비가 전체 사업비의 7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아직 댐의 위치, 규모 등 결정되지 않아 정확한 총사업비는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가 제방관리만 잘해도 홍수 등에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현재 제방은 과거에 내린 비를 가지고 100년 빈도를 예측해 설치된 것이지만, 최근 홍수 패턴은 이걸 넘어섰다”며 “제방만 가지고는 하천의 홍수에 대응하기 힘들다. 수십km 제방을 높이는 것보다 상류에 저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지역도 있다”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일부 지자체가 정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반박하는 것과 관련해

“미리 알리긴 했는데 보안 등의 이유로 아주 일찍 얘기하지는 못하고 발표 임박해서 전했다”고 해명했다. 14개 후보지 중 가장 규모가 큰 수입천이 포함된 강원 양구군은 발표 직후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군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양구군에 또 다른 댐을 건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댐 건설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달 중순부터 설명회를 갖고 주민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주민분들께 설명회를 개최해서 반대하는 지자체에 정부의 생각을 소상히 설명하겠다. 우려하는 부분을 자세히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전 세계 해적 납치·억류 사건 75% 늘어

(전년비)

해수부, 올해 상반기 선원 피해 98명

올해 상반기 해적의 선원 납치 및 억류 등의 사건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24년 상

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납치·억류 등의 선원 피해는 98명으로 지난해 상반기(56명)보다 75% 늘었다. 선박피랍도 4건으로 지난해 동기(2건) 대비 2배로 늘었다.

해역별로 아시아해역이 41건으로 가

장 많았다. 지난해 상반기(38건)와 비교해 8% 증가했다. 그간 아시아 해역의 해적 사건은 대부분 싱가포르 해협에서 발생해 왔지만 올해 들어 방글라데시 해상에서도 10건이나 발생했다.

납치·억류 등의 선원 피해는 상반기 전체(98명)의 절반 이상인 50명(51%)이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 집중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검역본부, 축산물 잔류물질 안전성 입증

KOLAS 국제공인시험 인정 획득

농림축산검역본부가 1일부로 축산물 중 잔류물질 검사(축산물, 화학시험분야)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인 한국 인정기구(KOLAS) 인정을 획득했다. 검역본부는 축산물 생산단계인 농장·도축장·집유장에서 국가 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KOLAS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산하 조직으로,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 등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인정 받은 국제공인시험 항목은 축산물 안전관리에 있어 항생제 내성 우려로 사용이 금지될 만큼 중요한 페플록사신을 비롯해 날리디산, 옥소린산, 플루메론 등 퀴놀론계 4종이다.

특히, 사용금지물질의 경우 통상적

으로 검사하는 기준인 백만분의 1(ppm)의 1000배가 넘는 10억분의 1(ppb)까지 검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로써, 사용금지물질에 대한 검증이 철저한 유럽 등으로 축산물 수출 시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검역본부는 기대했다. 1ppm이 1톤에서 1g이라면 1ppb는 1000톤(1리터 우유 100만 개 분량)에서 1g을 검출할 수 있는 능력으로 0.0000001%까지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검역본부는 이번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으로 우리나라 축산물이 생산 단계에서부터 세계적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밝혔다. 또 미국, 유럽연합 등 세계적 수준의 검사기관의 성적서와 상호인정이 돼 우리나라 축산물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고용부, 프리랜서 노동자 보호정책 마련

이정식 장관, 배달종사자 쉼터 방문
애로사항·정부 지원 관련 의견 청취

정부가 프리랜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선다. 표준 계약서 도입, 분쟁해결지원 쉼터 설치 등 현장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서울 양재동 배달대행 플랫폼 로지움의 배달종사자 쉼터에서 디자인, 소프트웨어개발, 대리, 마케팅, 번역 등 종사자와 만나 애로사항 및 정부 지원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이정식 장관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자유로운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 등에 따라 프리랜서 등이 앞으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프리랜

서의 경우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고용형태로 인해 기존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기 힘든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자 특정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가 보호의 주체가 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다양한 종사자의 안전과 휴식·건강을 위해 오늘 간담회 장소와 같은 쉼터 설치와 안전장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프리랜서로서 일하는 것이 원하는 시간·일정에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고 일하는 만큼 소득을 가져갈 수 있지만, 수입의 불안정성, 대출 등 직장인과 다른 대우, 배송·운전 직종의 경우 안전·건강의 위험 등이 있다고 얘기했다.

/김대환 기자